

[논평]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결과에 부쳐

8 편집국 | ⓒ 승인 2014.06.05 15:12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권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야권의 연대부족과 진보정당의 분열로 민심은 나아갈 곳을 선택하지 못한 채 주춤했다. 세월호 정국 하에서 드러난 지방선거 민심은 대선 이후 줄곧 정국을 장악해 온 정부여당에게 변화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기조를 전환해 책임을 묻는 민심에 응답해야 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야권과 진보정당은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는 변화를 향한 민심이 명확하게 표현됐다. 교육이 다음 세대와 미래를 책임지는 분야인 만큼 보수진영의 완패는 매우 고무적이다.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의 교훈과 반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전교조 죽이기에 골몰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앞세웠지만 외면당했다. 국민들은 교육에서부터 바뀌어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 채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돈과 이기적인 성공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교육, 지금 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에 다음 세대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 결과와 진보교육에 대한 갈망이 다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다른 미래를 갈망하지만,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민중들의 고달픈 일상을 대변하는 한편, 낡은 세력을 대신할 힘 있는 대안세력이 부재한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일상은 고달프고 정치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며, 마땅히 정부여당이 가장 깊은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고정적인 여야 지지층을 벗어난 국민들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민심의 이반이 시작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정치사회의 중심이라 할 서울과 수도권 민심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반대편에 서 있음을 고개 숙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결과에 절망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노동이 대안세력 구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4. 6. 5.



 편집국 kctu2670@nodong.org